

21 세기의 새로운 일본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성청(省廳)재편이 드디어 실현을 보게 될 모양이다. 1부(府)21성청을 1부12성청으로 대폭 줄이면서도 내각기능은 강화한다는 이 재편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일본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의 혁명적

근대에 이르러서만도 명치유신, 청일 및 노일전쟁, 태평양전쟁 등으로 엄청난 변혁이나 변화가 있었지만 일본은 대체적으로 보수성이 강한 나라다. 정치, 문화, 사회 각 분야에서 옛 것이 그대로 내려와 좋은 전통이 되고 있는 사례가 얼마든지 있다. 우선 백25대째 계속되고 있는 천황제도부터 세계에 유례없는 긴 역사를 지니고 있다. 남북으로 천황이 둘이 있어 싸우기도 했고 태평양전쟁에 지고 나서는 폐지 위기도 겪었지만 천황제는 아무튼 2천6백여년을 버텼다.

日本 見聞記 <최종회>

관심모으는 省廳 개편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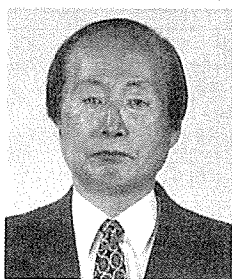
보수성이 강한 나라 일본에서 21세기의 새로운 일본으로 태어나기 위한 성청(省廳) 개편작업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성청 개편과정에서 과기청을 과학기술성으로 승격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문부성(文部省)에 흡수되어 문부과학기술성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큰 변화를 싫어하는 國民性

지금의 자민당 정권도 1955년 이래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얼마 전 잠깐 야당이 된 일이 있지만 적대관계에 있었던 사회당과 손을 잡고서 정권을 되찾았다. 국민이 큰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자민당 정권의 장기집권이 가능한 것이다. 이번 성청 재편에서도 대장성이나 문부성이나 하는 이름은 남는데 비단 그 부서가 막강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이름이 벌써 1100년쯤 올령제(律令制)가 시행되던 때 쓰였을 만큼 유서가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이번 재편에서 운수나 우정이나 건설이나 하는 것은 모조리 자취를 감추고 대장성과 맞먹는 힘을 갖는 통산성도 산업성으로 된다고 한다. 해외에 떨치던 노터리우스 MITI(약명높은 통산성)도 재편바람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수상이 정치생명을 걸고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여 주요 관료들의 거센 저항을 밀어붙인 가운데 성사를 시켰다 하지만 대장성 등 막강한 부서는 그대로 남고 그보다 약한 곳은 이름은 물론 중요 기능마저 딴 곳에 빼앗겼다 해서 두고두고 원망을 살 소지를 남기게도 됐다. 최종적으로는 미리 알려진 성청 명칭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그 귀추는 두고 보는 수밖에 없지만 21세기의 새로운 일본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어려운 작업을 했다는데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선 연구기관 같은 것이 설립된지 불과 몇 년 안되는데도 이름이 바뀌거나 없어지는 일이 흔한데 비해 일본의 연구기관은 참으로



李鍾秀
(기술평론가/ 본지 편집위원)

오랫동안 같은 이름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다.

통산성 산하 연구기관인 지질조사소는 1882년에 설립된 것으로써 백년 이상 같은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름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인 기구는 여러번 바뀌 시대의 변화에 뒤지지 않으려고 애써왔다. 오늘날 3백여명 직원이 국가의 자원정책을 뒷받침하느라 바쁘게 일하고 있다. 동경대학 부속의 동경천문대가 창설된 것은 1888년의 일이었는데 그 이름이 국립천문대로 바뀐 것은 1988년이었으니 실로 백년간 같은 이름으로 존속했던 셈이다.

「理化學연구소」이름 80년 존속

과학기술청관계 연구소로는 이화학연구소가 1917년 창립 이래 80년간 같은 이름으로 연구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다. 전후(戰後) 한 때 그 연구소는 주식회사 과학연구소로 개편되기도 했으나 곧 원래 이름을 되찾아 과학기술청 산하기관이 되어 날로 연구규모를 확대해 왔다. 이에 비한다면 1965년에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소는 그 뒤 한국과학원과 통합·분리 등 과정을 거쳐 이름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되는 등 변화를 너무 많이 겪었다.

그런가하면 최고의 과학기술정책심의·결정기관인 수상자문기관 과학기술회의도 1959년 설치된 이래 같은 이름, 같은 기구의 골격을 유지한 채 오늘날 제 몫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이에 상응될만한 최고 과학기술정책 심의·결정기구가 이제까지 있어 본 적이 없다. 기술진흥확대회의, 종합과학기술심의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이

과학기술회의와 같은 역할을 할 수는 없었다. 원자력위원회만해도 일본서는 1956년 1월1일에 발족된 이후 그 역시 기구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강력한 원자력정책심의·결정기구 기능을 발휘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과학기술청장관이 원자력위원장이거나 실제로는 학식과 덕망을 갖춘 원자력위원장 대리가 상임으로 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고

소된 이후 그 이름, 그 기구, 그 주소를 한번도 바꾸는 일없이 인원과 업무내용은 확대해가면서 고도정보사회에 걸맞는 정보전담기구로 발전하고 있다. 이밖에도 금속재료기술연구소, 무기재질연구소 등 소속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우주개발사업단이라든지 해양과학기술센터 등 산하법인체 연구기관도 당초 그대로의 이름과 모습으로 활기있는 연구활동



▲ 80년 전에 설립되어 패전 뒤 잠깐 명칭을 바꾼바 있으나 지금도 옛이름 그대로 활발한 연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리가쿠(理化學)연구소 본부건물

있다.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2명이라는 숫자도 처음부터 일정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1959년 10월 대통령직속의 원자력위원회가 발족했을 때는 3명의 거물급 상임원자력위원이 임명돼서 제법 활발한 기능을 발휘했으나 차츰 상임위원수가 감소되더니 지금은 비상임위원으로만 운영되는 힘없는 위원회가 되고 말았다.

아예 이름도, 기구도 없어져 버린 것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보센터라는 곳이다. 1967년 5월에 문교부에서 과학기술처로 이관된 바 있는 동센터는 1981년 12월에 이름이 없어진 채 기능만 상공부로 이관됐다. 그런데 이에 비해 일본서는 1957년 8월에 일본과학기술정보센터가 개

을 전개해 왔다.

문부과학기술성 개편 예상

이번 성청 재편과정에서 행정개혁회의의 여러 위원이 과학기술성으로 승격을 강력히 주장했으나 문부과학기술성 식으로 이름이나마 남기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문부성에 흡수되게 했다. 그렇게 되면 과기청의 연구기관은 어떻게 처리될지 사실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오랫동안 유지해 온 이름은 물론 기능, 업무내용까지 크게 바뀌버리는 것인지 어떤 지가 궁금한 것이다. 21세기 무한경쟁에 대비한 체질강화라면 일본은 연구기관의 이름을 바꾸는 것은 둘째치고 통·폐합까지 감행할지도 모른다. ①7